

군산시 조례 제1452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2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관·단체”를 “기관·단체·동아리”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14조제6호부터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6호로, 같은 조 제11호를 제7호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학습관 시설 중 동아리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학습관 운영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동아리실을 대관 할 수 있는 자격은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에 등록된 기관·단체·동아리로 한다.

제18조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습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동아리실 사용허가 시간은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동아리실 대관료는 별표1과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동아리실 사용자의 70% 이상이 별표3의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기준에 해당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동아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서식에 따른 군산시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3”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3”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① ~ ③ (생략)	제3조(기본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u>기관·단체</u>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 ----- <u>기관·단체·동아리</u> ----- ----- -----.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② (생략) <신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u>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7조(구성) ①·② (생략)	제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u>	<삭제>
5. (생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업무) ----- -----.
1. <u>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u>	1. <u>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제</u>

제공

2. (생 략)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 · 단체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를 위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10. · 11. (생 략)

제18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신 설>

학습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공

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6. · 7.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제18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학습관 시설 중 동아리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학습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동아리실의 사용허가 시간은 평생학습관 운영 시간-----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동아리실을 대관 할 수 있는 자격은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에 등록된 기관·단체·동아리로 한다

④ 동아리실 대관료는 별표1과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동아리실 사용자의 70%

이상이 별표3의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기준에 해당 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동아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서식에 따른 군산시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

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료는 별표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한다. 다만, 기술 및 자격증 교육의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습관 이용자가 별표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하고,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생략)

부칙(2016.10.31.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별표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전액감면)

제20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

① -----

-----별표3-----

-----.

② ----- 별표3-----

-----.

③ (현행과 같음)

부칙(2016.10.31.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별표3-----

[별표1] (제18조제4항 관련)

1. 동아리실 대관료

구 분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동아리실	평일	주간	1회(2시간)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액의 50% 추가징수 ○ 대관시간은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임
		야간	1회(2시간)	10,000원	
	주말	주간	1회(2시간)	10,000원	

군산시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동아리실1 (2층)		<input type="checkbox"/> 동아리실2 (2층)		<input type="checkbox"/> 동아리실3 (3층)		
기관(동아리)명				전체회원수/ (실사용 인원수)		명/(명)	
대표자 (신청자) * 대표자와 신청자가 상이할 경우 둘 다 기재	대 표 자	성명			신 청 자	성명	
		휴대폰				휴대폰	
		E-mail				E-mail	
신청일자 및 시간 * 희망시간에 ○ 체크	신청일자		년 월 일 ~ 월 일 (일간) (<input type="checkbox"/> 평일주간 <input type="checkbox"/> 평일야간 <input type="checkbox"/> 주말 주간)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09:00~10:00						
	10:00~11:00						
	11:00~12: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9:00~20:00						
	20:00~21:00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소모임 <input type="checkbox"/> 스터디강의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동내용 * 사용기간 내 활동내용 상세히 기재							
본 동아리는 군산시 평생학습관 동아리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로서 지켜야 할 대관시설 사용허가 조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군산시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기 관(동아리)명 :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대표자(신청자)명 : (인) </div>							
군산시장 귀하							

대관시설(동아리실) 사용허가 조건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2. 사용기간 중 대관시설의 설비 및 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한다.
3. 사용자는 대관장소에 행사관련으로 반입한 각종 물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학습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설치, 변경할 시는 반드시 학습관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한다.
5. 사용자는 대관장소에 행사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며, 행사관련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사용자는 행사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는 사전에 학습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행사에 따른 대.소도구 사용은 사전에 학습관의 해당부서와 협의 후 사용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한다.
8. 사용자가 사용료를 학습관 규정에 의한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학습관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 판매선전 행위를 할 수 없다.
10. 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및 학습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습관은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1.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학습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 후 잔액을 반환 할 수 있다.
 - 1) 행사 5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
 - 2) 5일에서 3일 전까지는 대관료의 10%
 - 3) 3일에서 1일전까지는 대관료의 20%
 - 4) 행사당일 취소는 대관료의 50%
12. 사용자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아리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 가.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 나. 학습관 운영 규정 및 사용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다. 타 학습동아리 활동에 피해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라.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마. 관리자의 승인 없이 외부인이 참가하는 경우
 - 바. 그 외 시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상기 허가조건의 위배 사유 발생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 대관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별표3](제20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평생학습관 수강료 등 징수 및 감면기준		평생학습관 수강료 등 징수 및 감면기준	
① 수강료 징수기준 (생략)		① 수강료 징수기준 (현행과 같음)	
② 수강료 감면기준		② 수강료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 면 비 율	감면대상	감면비율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전액감면

군산시 조례 제1453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25일

군산시장

문 동 현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를 삽입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 을 “계장” 으로 한다.

제8조 중 “수당과 여비,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경비” 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경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2인,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군산시 소속공무원으로 도시녹화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u> 시장이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녹지를 담당하는(산림녹지과)부서의 <u>담당</u> 이 된다. ② 생략	제7조(간사) ① ----- -----, ----- --- <u>계장</u> 이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과 연구비)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u>수당과 여비,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경비</u> 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연구비) ----- ----- ----- <u>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경비</u> 를 -----.

군산시 조례 제1454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25일

군산시장

본 동 인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기금”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활기금의”를 “기금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업의 범위)”를 “(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기금”을 “기금”으로 하며, 제3조제1호 중 “이자보전”을 “아자차액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자활지원계획”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 중 위소득 50%이하)

제4조제3호 중 “실시기관”을 “실시기관 (지역자활센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2편센트”를 “2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조성) <u>자활기금</u>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략) 5. <u>자활기금의</u>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6.·7. (생략)	제2조(기금의 조성) <u>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 1. ~ 4. (현행과 같음) 5. <u>기금의</u> ----- - 6.·7.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의 범위) <u>자활기금</u> 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 <u>이자보전</u> 2. (현행과 같음) 3. <u>지역자활지원계획의</u>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 7. (생략) <u><신 설></u>	제3조(기금의 용도) <u>기금</u> ----- ----- ----- 1----- ----- <u>이자차액 보전</u> 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u> ----- 4. ~ 7. (현행과 같음) 8.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 <u>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u> 9. 「 <u>지역신용보증재단법</u>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
<u><신 설></u>	

<신 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생 략)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근로사

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
금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4조(지원대상) -----

-----.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 (현행과 같음)
3. -----

업 실시기관

4. · 5. (생 략)

제6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 ② (생 략)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이나 자활공동체가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300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 6. (생 략)

제8조(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실시기관 (지역자활센터)

4. · 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2퍼센트-----

--.

④ -----
--- 자활기업이 -----

--.

1. ~ 4. (현행과 같음)

⑤ -----

-----.

1. · 2. (현행과 같음)

3. ----- 500만원 -----

-----.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자활기업이 -----

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 5. (생략)

제15조(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운용 심의) -----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
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군산시 조례 제1455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2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3항, 제10, 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 ~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

- ①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축제관련 전문가 및 축제발전에 적합한 자 중에서 2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하며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여행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2. 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발굴·육성
 3. 시간여행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4.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5.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6. 그 밖의 축제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
-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된다.

- ⑤ 감사와 간사는 위원 중에 선임하고 관광진흥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 ⑥ 추진위원회는 시간여행축제 운영을 위해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⑧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⑨ 추진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은 조례 제5조~7조, 제9조, 제15조를 따른다.
- ⑩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⑪ 군산시 시간여행축제의 분야별 유공자 및 수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 ① 대표축제라 함은 전북도에서 시·군대표 축제로 선정된 축제를 말한다.	제11조(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 <삭 제>
② 군산시 대표축제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 시간여행축제----- ----- -----.
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축제관련 전문가 및 축제발전에 적합한 자 중에서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내외----- ----- -----.
④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삭제>----- -----.
1. 대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1. 시간여행축제 -----
2. 대표축제 프로그램 발굴·육성	2. 시간여행축제 -----
3. 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3. 시간여행축제-----
<신 설>	4.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신 설>	5.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4. (생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부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된다.

<신 설>

⑤ 감사와 간사는 위원중에 선임하고 관광진흥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신 설>

⑥ 추진위원회는 시간여행축제 운영을 위해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⑧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은 조례 제5조~9조, 제14조를 따른다.

⑨ 추진위원회-----
-- 위원-----
----- 제5조~7조, 제9조, 제15조-----.

⑥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
----- 추진위원회-----
-----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군산시 지방보조금

⑦ 군산시 대표축제의 분야별
유공자 및 수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⑪ ----- 시간여행축제-----

-----.

군산시 조례 제1456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2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 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재정비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재정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련 부서의 공무원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환경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토목, 조명, 미술,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재정비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설치하는 [별표 1]의 시설물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전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기준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2.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공공디자인의 대상이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물 등

분 류		심의대상	비고
공공 시설	교통 시설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보행자도로, 차량진입방지말뚝,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방음벽, 교통신호기 등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위 금액 미만은 디자인담당부서 협의)
	가로 시설	가로등, 보안등, 펜스, 가로수 보호대(보호덮개 포함), 가로화분대 등	
	편의 시설	벤치, 파고라, 휴지통, 이동식 화장실 등	
	문화 관광 시설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전망대, 공원등, 동상, 기념물·기념탑 등	
	공급 시설	맨홀, 분전반 및 배전반, 환기구, 신호등 제어함 등	
	정보 매체	이정표, 안내표지판, 방향유도표시, 전광판, 광고판, 게시판, 현수막 게시대, 포스터 등 등	
	그 밖의 시설	공사장 가림막 등	
공공미술 및 공공조형물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시각이미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CI, 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지 제1호]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대상위치					
신청부서	부서명				
계획내용	규 모				
	용 도				
	구 조				
	신청내역				
설계자	주 소				
	성 명				
	사무소명		전 화		
신청기관 검토의견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자료

군산시 조례 제1457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2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명확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이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수집·운반·보관 및 체계적인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폐의약품 관리 결과를 5년 동안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불용의약품 관리에 적극 참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함께 복약 및 사용순응도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 및 사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을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배출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장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함에 있어서 원활하도록 회원과 약국에 독려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소와 자원순환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하여 매월 불용의약품 수거의 날을 정하여 병·의원과 약국 등 약품 취급하는 곳을 순회하여 폐의약품을 신속하게 수거 및 소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관)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반·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불용의약품 수거의 날에 수집·운반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별도의 표시된 용기 또는 부착표지 등을 하여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조례 제1458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2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품질을 향상시켜 시”를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여 군산시”로, “도모하는데”를 “높이는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표를”을 “『새들군산』상표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호 내지 5호”를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로, “6호”를 “같은 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항 4호 내지 5호”를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

분) 중 “발전에 기여할수”를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로, “지원할수”를 “우선 지원할 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하여 전시 및 판매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 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u>품질을 향상시켜 시 농특산물의 유통경쟁력을 도모하는데 있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생략)</p> <p>2. “공동상표”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u>상표를</u>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p> <p>3.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u>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여 군산시 -----</u> <u>높이는데 -----.</u></p> <p>제2조(정의) ----- ----- <u>각 호</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새들군산』 상표를 -----</u> -----.</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 <u>각 호</u>-----.</p>

1. ~ 4. (생 략)

제6조(신청자격) 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의 농산물을 생산·가공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농특산물생산업자 등으로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8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0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신청자격) ① -----
----- 각 호에 해당
하는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승인) ① -----

-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 같은 조 제1
항 제6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승인 취소) -----
----- 각 호-----

-----.

1. ~ 3. (생 략)

4. 제6조 1항 4호 내지 5호의 품
질관리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
은 경우

5. ~ 7. (생 략)

제15조(지원)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
용승인을 받은 농업인·생산자단
체·농특산물생산업자가 지역농
업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신 설>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5.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 ① -----

-----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에 기
여할 수 -- 우선 지원할 수 --.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
목에 대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 제
작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
목에 대하여 전시 및 판매행사 참
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군산시 조례 제1459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2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군산시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2. 군산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4.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

5.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대표
 6.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7. 생산자 단체 대표
 8.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장 또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 ③ 위원장은 군산시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초·중·고등학교 교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 ⑥ 기타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 ----- ----- ----- ----- ----- -----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관리 인증품 농산물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 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 -----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 원양산	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을 포함한다.

마. (생 략)

<신 설>

-----.

마.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센터운
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
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으로 구성한다.

1. 군산시의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

2. 군산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4.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

5.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대표

6.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
표

7. 생산자 단체 대표

8.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장 또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이 필요
하다고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군산시의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초·중·고등학교 교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⑥ 기타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 규칙 제634호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2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을 “자가 천재지변”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경우

제5조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소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u>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u> 이 <u>천재지변</u>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 의 동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감면조치) ① ----- ----- <u>자가 천재지변</u> ----- ----- ----- ----- ----- <u>지역사회복지협의체(소위원회)</u> ----- -----.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채무자 등이 사망한 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u>	2. <u>채무자가 사망한 경우</u>
<신설>	3. <u>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경우</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산시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 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 <u>지역사회복지협의체(소위원회)</u> ----- -----.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교부)신청서

1. 주 소 : 군산시 읍·면 로 (동,)
2.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3. 연 락 처 : 집) (핸드 폰)
4. 신 청 액 :
5. 상 환 기 간 : 거치 년 균등상환 (연 % 연체시 %)
6. 사 업 계 획
- 가. 사 업 명 :
- 나. 사 업 내 용 :
- 다. 사 업 장 위 치 :
- 라. 재 원 계 획 :

(단위:천원)

총 사 업 비	지 원 액	자체부담액	후원금	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 별첨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추 천 인
읍면동장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정보증서

용자신청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상기 자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5항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아래의 보증인이 채무 이행할 것을 재정 보증합니다.

년월일

보증인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인)
전화번호 :

보증인 지방세액 확인			
재산세 (주택, 건축물)	원	확 인 자	직 :
재산세 (토지)	원		성명 :

보증인 인감 확인			
보증인 인 감		확 인 자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관리대장

관리번호 :					용자일 :					
용자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명						만기일		. . .		
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상환내역										
회수	상환일자	상환금			상환잔액	납부일자	연체이자(년 %)			비고
		원금	이자	계			기간	일수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교부)신청서(기관·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총사업비	지 원 액	자 부 담	자부담 방법	후원금	비고

사. 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공고 제2017 - 752호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 규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명변경 (2016.11.1. 시행)에 따라 제명을 변경 반영하고, 조례상의 “인용조문”도 변경
-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자연재난 적용범위를 그대로 반영

2. 주요내용

가. 상위 규정 제명변경 (안 제1조, 제2조)

-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자연재난 적용범위 반영 (안 제3조)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풍랑, 해일, 조류 대발생, 조수

다. 인용조문 변경 (안 제4조)

- 제6조 3항 → 제6조 제8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우편번호 573-703)

- 전 화 : 063-454-3863(FAX 063-454-3829)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시장게시판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풍랑, 해일, 조류 대발생, 조수”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3항”을 “제6조 제8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지원 기준지수”이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5.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u>황사</u> 등의 기상특보(주의	제3조(적용 범위) ① ----- ----- <u>황사</u> , 풍랑, 해일, 조류 대발생,

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생 략)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영 제6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수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

제8호-----

-----.

[붙임 2]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산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 기준지수”이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이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풍랑, 해일, 조류 대발생, 조수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영 제6조 제8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3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7-753호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반영필요
- 조례 내용상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위험도 평가 실시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됨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명이 변경(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반영필요

2. 주요내용

- 상위법 제명 변경 (안 제1조)
 -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내용상의 의미 불분명, 지방자치법 제22조 의거 내용 변경(안 제3조제2항)
 - ▶ 군산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군산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군산시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 상위법 제명 변경 (안 제5조제5항제1호)
 -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우편번호 573-703)

- 전 화 : 063-454-3863(FAX 063-454-3829)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시정게시판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군산시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진 · 화산재해 대책법」 제21조----- -----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산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 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군산시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 운영 및 자격) ① ~ ④ (생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 운영 및 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 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 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3. (생략)

⑥·⑦ (생략)

⑤ -----

-----.

1. 「건설기술 진흥법」-----

2.·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붙임 2]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해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산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군산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군산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군산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군산시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 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의 방재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정하며 평가반의 반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⑦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지역본부장이 군산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군산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군산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군산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북도 또는 인근 시·군·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시·군 지역본부

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2014.04.28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17-754호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용어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개정(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반영하고,
- 조례상의 제1조(목적)에 약칭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개정하며,
- 상위법 「건축법」 개정(2008. 3. 21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상의 용어 개정 (조례명,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 자연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1조(목적)에 약칭 사용금지 (안 제1조, 제3조)
 - ▶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 ▶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 인용조문 변경 (안 제3조 제3호)
 -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 ▶ 동법 제14조 → 동법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우편번호 573-703)

- 전 화 : 063-454-3863(FAX 063-454-3829)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시정게시판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를 “군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항제9호”를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u> <u>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방향) <u>자연재해위험지구</u>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자연재해위험지구</u>”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p>	<p><u>군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u>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 ----- ----- -----.</p> <p>제2조(기본방향)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 ----- ----- ----- -----.</p> <p>제3조(용어의 정의) ----- -----.</p> <p>1.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p>

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생략)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략)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

-----.

2. (현행과 같음)

3. -----
제2조제1항제8호-----

----- 동법 제19조-----

-----.

4. ~ 7. (현행과 같음)

8.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② (생략)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

없다.

1. · 2. (생 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생 략)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생 략)

②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군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 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17-755호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2항 반영하여 개정
- 우리시 조례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2015.8.3 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 필요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명칭 변경(2010. 3.31 개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필요

2.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개정 (안 제3조 제1항)
 - ▶ 등록회원으로 한다. → 등록회원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조례 명칭 변경 (안 제11조 제1호)
 - ▶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명칭 변경 (안 제11조 제2호)
 -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내용 변경 (안 제11조 제3호)
 - ▶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우편번호 573-703)

- 전 화 : 063-454-3863(FAX 063-454-3829)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시정게시판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한 일비·여비

제11조제2호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협의회 운영 경비”를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76 -

[붙임 2]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군산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국에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명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군산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계장이 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한 일비·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7 - 756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2014. 12. 30 공포, 2015. 6. 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에서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다.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 라. 재난현장의 상황전파·출동·조치·긴급복구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
- 마. 재난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시기를 규정함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
 - ▶ 재난발생 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현장지휘, 재난예·경보발령 등
- 바. 통합지원본부의 장 사무 전결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우편번호 573-703)

- 전 화 : 063-454-3863(FAX 063-454-3829)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시정게시판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군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현장대응반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산시의 관·과·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하는 시간동안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면·동장을 말한다.
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

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 수습·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7.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산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1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별표 2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 사전지정,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지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보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부서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

대응반장을 임명한다.

2.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3.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역 소속 읍·면·동장을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업무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시 지원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에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4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3. 제9조에 따른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5.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6.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7. 제15조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8. 제1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9. 제19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10. 제20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11.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12.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13. 제24조에 따른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14. 제25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유관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등
상황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 분석, 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대민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별 표 2]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 (제7조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사고)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행정자치부	1. 주요시설(청사) 사고	총 무 과
문화체육관광부	2.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	3. 가축 질병 4. 저수지 사고	농 정 과 건 설 과
산업통상자원부	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6. 원유수급 사고 7. 전력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	8. 감염병 재난 9. 보건의료 사고	보 건 소 보 건 소
환경부	1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1.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3.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4. 황사	환경정책과 수 도 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안전총괄과
고용노동부	15.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투자지원과
국토교통부	16. 고속철도 사고 17. 도로터널 사고 18.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19. 육상화물운송 사고 20. 항공기 사고 21.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22. 건축물 붕괴사고	교통행정과 건 설 과 수 도 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경관과
해양수산부	23.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4. 조수(潮水) 25.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26.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사고)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금융위원회	27.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회 계 과
문화재청	28.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29. 산불 30. 산사태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국민안전처	31.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수산과
	32.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수산과
	33. 위험물 사고	안전총괄과
	34. 화재	안전총괄과
	35.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건축경관과
	36.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37. 지진, 38.지진해일, 39. 화산 40. 낙뢰 41. 가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17 - 758호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조례상의 제1조(목적)에 약칭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개정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 반영하여 개정
- 상위법령「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반영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수를 변경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개정으로 반영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에 약칭 사용금지 (안 제1조, 제2조)
 - ▶ (안 제1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 라 한다) →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 ▶ (안 제2조) 검토위원회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 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 사전영향성 검토위원수 변경 (안 제2조 제1항)
 - ▶ 20인 이상 40인 이하 → 40인 이상 80인 이하
-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개정 (안 제2조 제1항)
 - ▶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개정에 의거 반영 (안 제7조제4호)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 하는 중점검토항목 중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사항에 포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우편번호 573-703)

- 전 화 : 063-454-3863(FAX 063-454-3829)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시정게시판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검토위원회”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를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중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사항에 포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u>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u> (이하 “ <u>검토위원회</u> ”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u> ----- ----- -----.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u>검토위원회</u>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20인 이상 40인 이하</u>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u>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u> (이하 “ <u>검토위원회</u> ”라 한다)---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제7조 (기능)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u>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u>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중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사항에 포함</u>

[붙임 2]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 (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중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사항에 포함

제8조 (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17-759호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나. 회계책임관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안 제3조)

다. 기획예산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 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5조)

마.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 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각 관·소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 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 장에게 세출예산 한도액을 통지(안 제50조)

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2조의4)

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 (송금지급명령→계좌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 (안 제58조, 제59조, 제111조, 제113조 내지 제116조)

아.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안 제77조)

자.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징수과장이 총괄, 금고의 검사는 징수과장이 통합 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안 제123조)

차. 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제2조)

카.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 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5조의2)

타.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만한 서류에 인감 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56조)

파.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4조)

하.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3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2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jo0514@korea.kr

2) 주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회계과

3) 팩스 : 063-452-81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회계과(전화 : 063-454-2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2017- 767호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1. 입법(개정)이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 내용을 추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남용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며, 조사·연구 의뢰의 사무처리 권한을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체계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 내용 추가 (안 제3조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 반영하여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 내용 추가

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전 해촉 사유 규정 (안 제4조제2항)

-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조사·연구 의뢰 사무처리의 권한 변경 (안 제9조제1항)

- 정책 및 계획안 심의, 의안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사무의 체계상 적절치 않으므로 조사·연구 의뢰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 변경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5월 15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 063-454-3513, FAX : 063-454-3829)
- 전자우편 : jajajja@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계(전화 : 454-35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조례명 :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제1항 중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 7. (생략)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u>위원회의</u>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③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u>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u>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u>②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 <u>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u>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u>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② (생략)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u>위원장은</u> ----- -----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장(이하“지역축제 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본호신설 2010.06.30>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건설교통국장)
2. 군산소방서장
3. 군산경찰서장
4.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군부대장
5. 군산교육청 교육장
6.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

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出席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7-768호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1. 입법(개정)이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시 성별 균형 내용 추가, 조직개편사항 반영 및 자문기구인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시 성별 균형 내용 추가 (안 제3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 반영하여 자문단 구성시 성별 균형 내용 추가

나.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 등 의무 규정 삭제 (안 제9조, 10조)

- 제7조에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규정이 있어 일부 내용이 중복되며,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기구인 안전관리자문단에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사항 결과보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자문기구 운영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아 관련 의무 규정 삭제.

다. 조직개편사항 반영 (안 제12조)

-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
- ‘재난안전담당’을 ‘사회재난계장’으로 변경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5월 15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 063-454-3513, FAX : 063-454-3829)
- 전자우편 : jajajja@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계(전화 : 454-35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재난안전담당”을 “사회재난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시장</u> 이 위촉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장</u> 이 <u>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u>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u>시장</u> 이 <u>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u> 이에 <u>응하여야 한다.</u>	<삭 제>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u>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삭 제>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재난관리과장</u> 이 되고 서기는 <u>재난안전담당</u> 이 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 ----- ----- <u>안전총괄과장</u> ----- <u>사회재난계장</u> ----- ----

[붙임 2]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산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재난계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

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7-769호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1. 입법(개정)이유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은 폐지되었고, 새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변경사항 반영 및 과태료의 부과 방법 등 규정 삭제, 중복된 제15조제2항제2호 순번 변경하여 조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준용기준 변경 (안 제5조제6항)

-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은 폐지되었고, 새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8호, 2015.6.10.)이 제정되어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준용기준을 제정된 지침으로 변경

나. 과태료 부과 방법 등 규정 삭제 (안 제7조제4항)

- 과태료의 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규정 삭제

다. 중복된 제15조제2항제2호 순번 변경 (안 제15조제2항)

-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변경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5월 15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 063-454-3513, FAX : 063-454-3829)
- 전자우편 : jajajja@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계(전화 : 454-35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 · 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 ⑤ (생략)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 시설 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의 이 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 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 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 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생략) 2.·3. (생략)	제15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2. (현행과 같음)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붙임 2]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군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낙시, 투망 등), 건너는 도중의 사고,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D B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제)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

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TF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의한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아이폰
4.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경보시설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 2017-770 호

공 고

군산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개정)이유

군산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대하여 제2조에서 이미 약칭하고 있기에 다시 기술할 필요가 없으며, 제8조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조례 제5조 제1항 중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를 “법” 으로 수정
- 조례 제5조 제2항 중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를 “영” 으로 수정
- 조례 제8조 제1항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를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5월 14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 063-454-3512, FAX : 063-454-3829)
- 전자우편 : uffda@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계(전화: 454-35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조례명 : 군산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

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등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기구가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기구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

하게 한다.

②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 법 제12조제1항----- ----- ----- -----.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기구가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 영 제11조-----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17-52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6-55호(2016.4.29.)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3	24	집산 도로	646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 도로	-	군산시고시 제2016-55호 (2016.4.29)	
변경	중로	1	103	24	집산 도로	646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 도로	-	군산시고시 제2016-55호 (2016.4.29)	법면부포함
기정	소로	2	989	7~8	국지 도로	1,538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 도로	-	군산시고시 제2016-55호 (2016.4.29)	
변경	소로	2	989	7~8	국지 도로	1,538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 도로	-	군산시고시 제2016-55호 (2016.4.29)	법면부포함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103	중로1-103	• 경미한 변경 (법면부 포함) (법면포함폭 B=27.7~32.5m)	•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으로 법면을 포함하여 결정함
소로2-989	소로2-989	• 경미한 변경(법면부 포함) (법면포함폭 B=7~12.2m)	•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으로 법면을 포함하여 결정함 (기개설된 도로(L=1,417m) 포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개요

가. 위 치 : 군산시 개사동 1124-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3호선외 1개노선)사업

2) 명 칭 :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 중로 1-103호선 : B=24m, L=646m, A=19,794㎡

2) 소로 2-989호선 : B=7~8m, L=121m, A=1,270㎡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성 명 : 군산시장(항만물류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참고

3. 관계도서(지형도면 포함)는 군산시청 항만물류과(☎063-454-2812) 및 도시계획과(☎063-454-3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중로1-103호선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개사동	1029	답	4,952	1,990	나일환	전북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코아루아파트 109동 404호			사유지
						이종구	전북 군산시 계산로 78, 102동 1402호			
						박요한	전북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8동 102호			
2	군산시 개사동	1030-1	답	2,476	1,808	이종구	전북 군산시 지곡동 4205 도현해나지오아파 트 102-1402			사유지
						박요한	전북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8-102			
3	군산시 개사동	1047	답	5,484	2,286	강태산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42 산북주공아파트 203동 401호			사유지
4	군산시 개사동	1048	답	6,334	2,712	신명만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 봉리 838-2			사유지
5	군산시 개사동	1075	답	3,296	1,718	송명재	전북 군산시 산북동 168			사유지
6	군산시 개사동	1076	답	4,053	1,568	송명재	전북 군산시 산북동 168			사유지
7	군산시 개사동	1094	답	4,853	1,793	해담영농 조합법인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 심로207번길 6-7			사유지
8	군산시 개사동	1095	답	4,853	2,263	송명재	전북 군산시 개사동 1136			사유지
9	군산시 개사동	1123	잡	1,905	824	최광덕	전북 옥구군 미성읍 개 사리 672-55			사유지
10	군산시 개사동	1123-1	도	1,785	105	군산시				공유지
11	군산시 개사동	1124	답	2,200	793	문형선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 황길 51-5	농협 은행	서울시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사유지 (지상권)
12	군산시 개사동	1124-1	도	1,787	80	군산시				공유지
13	군산시 개사동	1204-8	구	85,988	1,497	국(농수산부)				국유지
14	군산시 개사동	1208	도	1,636	231	국(농수산부)				국유지
15	군산시 개사동	1212	도	2,780	126	국(농수산부)				국유지
합 계	15필지	-	-	134,382	19,794					

2. 소로2-989호선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옥서면 옥봉리	388-2	도	340	124	국(국토부)				국유지
2	옥서면 옥봉리	388-3	대	86	5	김순동	옥구군 옥서면 옥봉리 387-4			사유지
3	옥서면 옥봉리	388-4	도	149	9	국(농수산부)				국유지
4	옥서면 옥봉리	388-5	도	620	154	군산시				공유지
5	옥서면 옥봉리	389-2	도	400	312	국(국토부)				국유지
6	옥서면 옥봉리	390-2	도	76	15	군산시				공유지
7	옥서면 옥봉리	391-2	도	69	51	군산시				공유지
8	옥서면 옥봉리	392-1	대	576	176	이윤구	경상남도 양산시 평상동 568-23			사유지
9	옥서면 옥봉리	392-5	도	92	5	군산시				공유지
10	옥서면 옥봉리	392-7	답	3,354	419	이종완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66-1 1-1409 유원아파트			사유지
합 계	10필지	-	-	5,762	1,270					

군산시 고시 제2017-5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오식도동 유승한내들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유승종합건설외 2
 - 나. 대 표 자 : 민 광 옥
 -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7층(논현동, 유승테라폴리스)
3. 시 공 자
 - 가. 명 칭 : (주)유승종합건설
 - 나. 대 표 자 : 민 광 옥
 -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7층(논현동, 유승테라폴리스)
4.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05-4번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52,271.2900㎡
 - 라. 건축면적 : 7,992.0097㎡
 - 마. 연 면 적 : 145,688.4710㎡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20~29층 /아파트 14개동외 1,159세대
 -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1,159				
60A형	민영주택	534	60.0000	24.6132	84.6132	
60B형	민영주택	179	60.0000	24.5409	84.5409	
60C형	민영주택	108	60.0000	24.9583	84.9583	
74형	민영주택	338	74.9646	24.9942	99.9588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84,168,078,000원

차. 사업기간 : 2016년 3월 2일 ~ 2019년 2월 28일

5. 주요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주체	(주)유승종합건설	(주)유승종합건설 (주)유승건설 (주)유승산업개발	

6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7. 3.13.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7 - 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7-0003호 (2017. 04. 20)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3길 5
 - 성명 : 최 점 념
- ③ 허가목적 : 어구정리 및 작업장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413-2번지 인근
- ⑤ 면 적 : 642㎡
- ⑥ 허가기간 : 2017. 4 20. ~ 2017. 12. 31.까지